



의례적, 방어적, 의도적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의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관행 연구

김창숙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Ritual, defensive, intentional

A study on gatekeeping practices centered on fact-checking of major Korean newspaper editors*

Changsook Kim**

Researcher, Ewha Communication & Media Research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actices regarding how major Korean newspaper editors check and verify the facts contained in the articles written by reporters during the gatekeeping process, and how they refine articles in a way that confirms the facts. Unlike previous gatekeeping studies, which were mainly about news topics or factors that influence gatekeep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gatekeeping behaviors centered on fact verification. To that end,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2 editors of the social affairs department of six major daily newspapers: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Kyunghyang Shinmun, and Hankook Ilbo. Results showed that editors were checking facts formally and defensively based on trust, common sense, and experience, like a rite of passage, and they also distorted the truth according to the 'required facts'. In terms of expression, perceptions and practices were separated from the reporter's anonymous expression, only the expressions that were clearly problematic were corrected, and there was a practice of expressing opinions by pretending to convey objectivity. Overall, editors were more aware of the fact-checking norms related to coverage and article writing, but it was found that, the more specific questions were asked, the more they emphasized the limitations of practice and justified the wrong way of doing things. Most interviewed editors had rationalized, internalized, and consolidated existing practices, and were unable to break away from existing wrong practices if they did not actively engage in learning with a sense of problem on their own.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earcher suggested reinforcing journalism education for editors, assigning fact-checking staff, and teaching citizens' news literacy, and stressed the need for Korean media to be reborn as truth verifiers. The study is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part of Kim Changsook's(2019) doctoral dissertation.(이 논문은 김창숙(2019)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changchangh@naver.com

meaningful in that it has expanded its research on gatekeeping and media practices academically. Until now, gatekeeping research has mainly studied how gatekeeping has changed in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what factors affect gatekeeping. This study found out the gatekeeping practices, focusing on checking the facts, which can be said to be key in the news gatekeeping process, and found out more specifically the cause of the production of inaccurate reports that are not accurate. This study expands the subject and scope of research through specialized research for editors. In practice, it is meaningful that the clues for resolving the problem were substantiated by understanding the internal practices of the media. Until now, many studies have criticized news released without confirmation of facts, but the causes have been discussed somewhat abstractly. Editors' perceptions of facts, facts confirmation, and practice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can be a practical guide in suggesting solutions that urge the press to report accurately and truthfully.

Keywords: Journalism, Gatekeeping, Editing Practices, Fact Checking & verification, Objectivism

1. 문제제기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다. 여러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저널리즘만이 유일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확인의 규율은 저널리즘과 그 외의 것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 보도지침 등은 “사실만을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쓰여 있다. 확인, 검증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70세 언론수용자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2%가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5.7%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무화할 때 누가 팩트체크의 주체여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언론사’라는 답변이 71.5%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조사인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팩트체크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실천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다. 올해 개정된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취재 보도준칙은 모두 정확성, 검증을 우선시한다고 쓰여 있으며, 조선일보는 내부 구성원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일부터 2면에 ‘바로잡습니다’ 고정 코너를 신설해 매일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있다(김달아, 2020, 6, 10).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언론인 조사에서 언론인들은 꾸준히 보도의 정확성을 취재 보도 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고, 중요도에 대한 인식 또한 2013년 3.72에서 2017년 4.79, 2019년 4.81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이 보도된 기사, 즉 오보 연구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오보 현황을 보면,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언론인들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리프만(Lippmann, 1920/2011)이 100여년 전에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사실 확인 기법은 여전히 체계화,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국 언론사 취재 기자도 취재하면서 소속 언론사의 관행에 따라 의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 주요 신문 사회부 취재기자들은 객관주의 형식에 맞춘, 의도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가장된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을 혼용하고 있었다(김창숙, 2020)

그렇다면 취재기자와 함께 기사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터들은 어떻게 사실을 확

인하고 있는가. 언론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은 조직적 행위로(Redmond, 2006), 일반적으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취재기자보다 연장자이면서 경력이 많은 에디터의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기사의 질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에 해외 선진 언론사들은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을 취재 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에디터의 철저한 게이트키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에디터는 취재 기자의 관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 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특히 한국 언론사는 기사 선택에서 취재, 편집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보다 위계에 의한 조직적 결정인 다단계 게이트키퍼가 더 우선시 되고 있으며, 에디터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사실의 왜곡이나 특정 관점의 지배가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김동규·김경호, 2005). 개별적인 사실을 확인해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데 실패하고, 전체적인 기사가 전달하는 사실성과 진실성 확보에 대한 경험론적 방법론을 구축하는데도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에서(이나연, 2018),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에 실패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취재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가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과 인터넷, SNS의 발달은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트키퍼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게이트키퍼가 축소되고 있으며(Bruns, 2003), 이로 인해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¹⁾ 2015년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는 언론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터들의 사실 확인 관행을 알아보는 것은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사를 생산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 종합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기사가 생산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 관행에 주목했다.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 12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취재 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사실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기사의 표현은 어떻게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지 알아보았다.

1) 2017년 5월 SBS는 세월호 관련 오보에 대해 SBS 사과문은 "기사작성과 편집 과정에서 게이트키퍼가 미흡해 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가 방송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2019년 '뉴스룸 축소와 뉴스 생태계의 건강성'을 주제로 열린 관훈세미나에서도 여러 언론학자들은 게이트키퍼의 축소와 이에 따른 질적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1) 게이트키퍼 연구와 사실 확인

게이트키퍼 이론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inger, 1998). 수많은 이슈와 뉴스거리 중 출고되는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뤄진 게이트키퍼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즉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고, 어떤 내용이 게이트키퍼 되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화이트(White, 1950) 등 초기 게이트키퍼 연구자들은 게이트키퍼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웨슬리와 매클린(Westley & MacLean, 1957)을 거치면서 조직 차원으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슈메이커(Shoemaker, 1991)에 의해 영향 요인이 세분화 되면서 뉴스 제작 관행과 조직의 특성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게이트키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즉 게이트키퍼 과정에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게이트키퍼 연구의 또다른 관심사는 무엇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선택, 배제되는가의 문제, 즉 내용 측면이다. 여러 학자들은 기사의 시의성, 영향력, 정확성, 갈등성, 부정성, 회귀성, 근접성, 저명성, 흥미성이 저널리즘이라는 측면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심재철, 2003; 심재철·정완규·김근수, 2003; 정윤서, 2012; Shoemaker, Danielian, & Brendlinger, 1991), 이것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기사화를 결정하는 속성으로 보았다. 이 중 정확성은 이슈가 기사화되기 위한 전제로, 여러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선행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이며, 저널리즘의 핵심인 사실 확인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뉴스가 확인된 사실을 다룬다는 전제는 당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한 정확성 여부는 언론 현장과는 달리 게이트키퍼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다. 전통적으로 게이트키퍼는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 루머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Nisbet & Garrett, 2010). 언론사는 독자에게 소문이나 의견이 아니라 그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집 절차를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이트키퍼는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것뿐 아니라 '신뢰도 높은 기사'를 출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즉 뉴스의 질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Borden & Tew, 2007). 그리고 이러한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 언론사의 게이트키퍼 역할은 허위와 진실이 뒤섞여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 현 시기에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국내의 언론사들은 다층적인 게이트키퍼를 거치는 뉴스 생산 체계를 통해 생산되는 뉴스의 품질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언론사 편집국은 시티 에디터(City editor), 뉴

스 에디터(News editor), 카피 데스크 치프(Copy desk chief), 카피 에디터(Copy editor), 카피 데스크 치프(Copy desk chief) 등 다층적이고 계층적인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취재자가 작성한 기사를 재확인한다(Missouri group, 2017). 취재자가 기사를 작성해 시티 에디터(한국 언론사의 사회부 에디터)에게 전달하면 시티 에디터는 1차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빠진 사실이나 추가돼야 할 사실들을 지적해 기자가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카피 에디터는 기사의 글을 다듬고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세부 사실들을 확인한다. 카피 에디터의 역할은 보통 시간을 들여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언론사 실무를 다루는 교재에서 카피 에디터의 업무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는 경우가 많다.²⁾ 이러한 계층적이고 단계적인 에디팅 과정 초반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거리가 될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기사의 초고가 작성된 이후에는 기사 내 주요 사실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제시된 사실들이 믿을만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사실확인이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수 있지만, 다층적인 에디팅 시스템은 그 자체로 기사에 포함된 오류들을 걸러낼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주요 언론사는 5단계 이상의 다층화된 에디팅 시스템을 끝낸 후에도 별도의 팩트체크 팀이나 프리랜서 팩트체커를 통해 기사에 쓰인 사실을 재확인한다. 이들은 기사에 쓰인 모든 취재원에게, 예를 들어 자료일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사람일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녹취록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실제 취재된 내용인지, 취재된 내용이 잘못 인용되진 않았는지, 기사의 맥락과 취재원의 맥락이 다르진 않은지 재확인한다. 또 지금은 사라졌지만, 스탠다드 에디터(standard editor) 제도를 통해 기사의 정확성과 익명취재원, 바이라인 등에 대한 내부 윤리 기준을 세우고 실행정도를 점검해 기사의 품질을 관리하기도 했다(Siegal Committee Report, 2003).

실제로 에디터는 취재와 기사 작성 관행의 실질적인 행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의 행위규범을 알아보기 위해 살펴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로이터(Reuters)〉와 〈AP〉 등 주요 언론사의 윤리 강령과 업무 지침의 각 항목 마지막 즈음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경우 늘 에디터와 논의해 결정하라고 쓰여있다. 〈뉴욕타임즈〉는 취재 중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에디터에게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여 에디터에게도 사실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는 속보도 한 명 이상의 에디터가 검토한 후에 출고되어야 하며 기사의 복잡성과 민감성,

2) 엔손(Einsohn)이 저술한 『The copyeditor's handbook: A guide for book publish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 세번째 에디션은 인텍스를 포함해 559쪽으로 이뤄져 있다.

시간적 압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출고 전에 반드시 단계적인 에디팅 과정을 통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쓰여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의 에디토리얼 코드(editorial code)에도 취재원에 대한 만족은 기자, 특파원 뿐 아니라 데스크 에디터(Desk editor)의 책임이며, 서브 에디터(Sub editor)는 정보의 신뢰성에 도전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미국 언론사 편집국은 충격적인 오보를 겪으면서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를 강화해왔다. 1980년 '지미의 세계(Jimmy's World)' 사건 이후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사들은 에디팅 과정에서 취재 기사를 더욱 의심하도록 하고 익명 취재원 사용에 대한 규칙들을 마련했으며 언론 윤리를 정비하는 등 사실확인을 더욱 강조했다.³⁾ 이후 2005년에도 <뉴욕타임즈>의 제이슨 블레이어(Jayson Blair)가 50여 건의 기사를 표절,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편집부와 독립된, 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사의 오류를 심의하는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⁴⁾'를 신설하기도 했다. 영국의 BBC 역시 2002~2004년 '길리건 사태' 이후 편집 책임자에 대한 취재 보고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선진 언론사들은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을 취재 기자 뿐 아니라 에디터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에디터의 철저한 게이트키퍼를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전통적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지만, 코바치와 로젠스틸은 지금은 게이트키퍼를 통해 품질을 더 고급화시킬 때라고 말한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또 디지털과 인터넷, SNS의 발달은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트키퍼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Singer, 2008). 휘발성과 단발성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 보도에서 '신뢰성'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해야하고, 이를 위해 게이트키퍼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김동원·김지현, 2017) 실제로 유럽저널리즘센터(European Journalism Centre)가 발행한 'verification handbook'은 루머와 허위 콘텐츠가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인은 진실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UGC(user-generated content) 사실 확인 방법을 122쪽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가 강조되고, 선진 언론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3) 실제로 당시 Janet Cooke 기자의 에디터이자 연인이었던 스잘라비츠(Szalavitz, 2010, 10, 1)은 '지미의 세계 이후 30년'에서 "길거리에서 사는 가난한 중독자 부모가 그들이 금단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비싼 약을, 중독되기까지 몇 주 동안 매일 8살 아이에게 주었을까 하는 의심을 했지만 쿡에게 물어보진 못했고, 다른 에디터도 물어보지 않았던 점을 후회한다"고 썼다.

4) 퍼블릭 에디터 제도는 2017년 5월 31일로 없어지고 독자 센터(reader center)로 대체됐다.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 언론 학계에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2)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역할과 수행 방식

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국내에는 에디터가 어떻게 에디팅을 해야하는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기사를 에디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거의 없다. 다만 그동안 발행된 취재와 보도 관련 지침서 등에 기술된 기사를 검토하는 방법은 에디터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요 언론사에서 수행하는 팩트체커의 업무를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작업은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업무를 주로 한다는 측면에서 에디터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역할과 유사성을 갖는다. 이를 참고하면 에디터의 사실 확인 과정은 내용과 표현 측면의 사실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용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재기자의 사실 확인 행위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기자의 사실 확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 사실이 재확인됐는가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을 통해 사실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는가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창숙, 2019). 이를 확인하는 에디터의 행동 기준에 대해서는 코바치와 로젠스틸(2014/2014)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있는 기준들을 참고할 만하다. 오리건주의 <오리거니언(The Oregonian)>지, 코네티컷주의 <더 데이(The Day)>지 등의 에디터는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기사 고치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사를 한 줄 한 줄, 단락 단락씩 꼼꼼하게 따지며 기사의 주장과 사실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주장과 서사적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Kovach & Rosenstiel, 2014/2014). 취재기자는 취재 시 수집한 자료를 가져와서 기자와 에디터가 나란히 앉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독자는 왜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 문장 뒤에 있는 선입견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하라고 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해외 선진 언론사의 팩트체크 부서, 프리랜서 팩트체커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선진 언론사나 <뉴욕커(The New Yorker)> 같은 잡지사, 독일 <슈피겔(Der Spiegel)>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킹(fact checking) 부서는 기사가 출고되기 전에 기사에 쓰여진 모든 취재 내용, 즉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팩트체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팩트체커(fact checker)는 기사에 쓰인 내용들의 사실성을 자료와 취재원을 바탕으로 하나씩 검증하는 일을 한다. 팩트체커들은 기사에 쓰여진 기본적인 사실과 숫자, 인용, 개념, 비유, 이미지, 물리적 서

술(physical description), 스포츠, 역사적인 인용과 이야기들, 외국어, 외국 출처, 상식, 제목과 표지에 인쇄된 주요 기사 제목, 익명의 취재원이나 민감한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사실, 모순되는 사실들, 회색지대(gray areas)등을 모두 확인한다(Borel, 2016). 또 이들은 기사에 쓰인 이름, 날짜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에디토리얼 판단을 하도록 기대를 받으며, 기사에 직접 인용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사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Canby, 2012). 또 팩트체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해당 취재원이 믿을만한지 확인하는 것이다(Schäfer, 2011). 예를 들어 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믿을만하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를 취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팩트체커가 지적하고 다른 취재원을 활용하도록 제언할 수 있다. 이처럼 팩트체커가 하는 일은 기자와 에디터가 하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므로, 팩트체커의 기술은 기자와 에디터에게 요구되는 것과 겹치는 것이 많다.

표현 면에서는 기사 작성 기준과 관련해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 투명성의 원칙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창숙, 2019). 미국신문편집인협회, 미국기자협회의 활동 원칙과 윤리강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취재원의 이름 또는 얼굴을 밝히고 이들의 정보와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라고 쓰여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만 A4 2페이지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신문의 의무는 취재원이 아닌 독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취재원 정보원에 대한 귀속을 피하고, 익명 취재원에 대해 신문사가 왜 신뢰를 하게 됐는지, 독자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쓰여 있다. <AP> 통신도 'Associated Press statement of news values and principles'에서 익명 취재원은 그 정보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출처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만 익명으로 보호한다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도 신문협회 신문윤리강령 제5조에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와 관련된 5개 조항이 있는데 모든 항목이 익명 취재원 사용과 표기에 대한 원칙이다. 주요 내용은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기하지 말 것, 제 3자를 비방하는 내용일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지 말 것, 공익에 관한 경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취재원의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힐 것, 기자가 익명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불법 행위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말 것, 취재원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말 것 등이다. 개별 신문사의 보도 준칙은 신문협회의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과 <한겨레> 취재보도준칙도 보도의 기사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들 신문에서도 취재원 실명 표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익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익명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

적으로 명기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취재원 인용문의 작성, 인용문의 서술어 작성, 문장 내 형용사·부사 등 의견을 포함한 내용 사용의 금지와 표절에 대한 항목까지, 모든 내용은 선진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사실과 의견 분리의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디터들의 표현과 관련된 사실 확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위에 제시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경우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중 취재원 명사와 관련된 제2조에서 7항에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받은 담당 부서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에디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윤리 규정에서 “불가피하게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담당 부서장이 판단한다”고 쓰여 있다.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다. 제3장 정직한 보도에서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고 쓰여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기사 내용과 표현의 사실 확인과 관련해 취재 기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에디터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한국 에디터의 사실 확인 관련 게이트키퍼 수준

한국의 경우 편집국 내 에디팅 과정은 기본적으로 선진 언론사에 비해 느슨하다. 에디터 외 인력이 사실 확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에디터에게 사실 확인 역할이 집중되어있는 편이다. 편집국 내 에디팅 단계는 가장 다층화되어있는 사회부가 취재기자-캡-차장-부장-부국장-편집국장 등 총 5단계 정도이고, 다른 부서는 보통 3단계로 이뤄져 있다. 교열부나 심의실이 미국의 카피에디터(copy editor)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교열부는 외주화되고 심의실은 주요 신문사에서조차 없어지는 추세다.⁵⁾ 또 디지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에디팅 시스템이 더욱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역할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나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김동규와 김경호(2005)는 한국 편집국 구조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실의 왜곡이나 특정 관점의 지배가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

5) 사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중 심의실이 존재하는 곳은 동아일보밖에 없었다. 또 중앙일보는 2019년에 교열부를 외주화했다.

직적 편집국 구조가 기사의 선택에서 취재 편집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취재나 편집 기자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위계에 의한 조직적 결정인 다단계 게이트키퍼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편집국장 중심체제와 데스크 중심의 통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들에게는 ‘지침에 충실한 기사’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집국장의 이념과 사고방식 등이 취재 조직 전반에 내면화되어 사실 왜곡과 특정 관점에 의한 기사 취재와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인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커리어의 수직적 이동, 즉 승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구조이다(장하용, 2004).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방송사와 신문사 에디터 모두 취재 경력에 따른 전문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이를 통해 미뤄봤을 때, 에디팅 과정에서 사실 확인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여년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홍유진(2007)의 연구는 실제 한국 신문 편집국 내 에디팅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유진에 따르면 원래 모든 기사는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의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평소의 관행에서 이 정도의 기사면 사실일 것 같다는 확인 작업이 밑으로 위임이 되고 있었다. 1면 톱이나 해당면 톱 같은 비중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부국장들이 신문 대장을 보고 읽어 보면서 부정확한 사실을 걸러내기도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기사의 경우는 부국장이나 국장이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비싼 경우 기사에 따라 차장만 보고, 부장을 건너뛰어 바로 교열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에디터들의 사실확인 수준도 느슨한 편이다. 한국 언론사의 데스크들은 일반적으로 기사의 사안(민감성 정도)과 기사가 실릴 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단계와 강도로 기사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데스크는 담당 취재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이 표절이나 날조가 아닌,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으며, 의문이나 의심이 가는 사실에 대해서도 데스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 기자에게 재확인을 요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에게 데스크가 직접 사실을 재확인하는 행위는 데스크와 취재기자 모두 해당 기자를 불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므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취재기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에디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사 검토 과정에서 데스크와 취재 기자 사이의 논의가 적어, 데스크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기사의 경우 오보일 가능성도 높았다. 데스크가 익명 취재원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검토하고 기사화할 가능성도 높았다. 기사를 검토하는 과정,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메뉴얼이 없어 현장 경험과 감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요 매체 에디터의 전문가 역할 인식이 포털 매체보다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일

권과 유봉석(2012)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 편집자의 전문가 역할 개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주요 역할 인지, 특히 '미확인 정보 제외' 관련 항목에 대한 역할 개념이 중앙일보, 매일경제, YTN 등 인터넷 신문 편집자보다 높았다. 이들은 편집 품질에 대한 상호 인식에서도 포털 뉴스가 인터넷 신문보다 품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신문 편집자 역시 타사 인터넷 뉴스보다 포털 뉴스의 편집 품질을 더욱 높게 인식했다.

상시적인 온라인 출고 시스템은 전통적인 시간적 뉴스망을 해체해 사실확인 관행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바른 뉴스'보다 '빠른 뉴스' 생산이 강조되면서 취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데스크의 에디팅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포털에 출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 '게이트키퍼'가 아니라 '게이트워칭'이 이뤄지고 있다(김동원·김지연, 2017). 디지털 퍼스트를 기조로 삼은 <중앙일보>의 경우 취재기자가 쓴 원고가 인터넷에 먼저 출고되고, 편집국에서 일부를 편집해 지면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적 뉴스망의 해체는 그동안 유지해 온 뉴스 제작의 시간적 리듬과 뉴스 유형화(typification)를 둘러싼 관행적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모, 2012). 실제로 <중앙일보>의 경우 디지털 퍼스트 선언 이후 에디팅 단계가 대폭 축소됐고, 상대적으로 기사출고 권한을 가진 에디터는 기존 부장과 차장 정도에서 현장 팀장, 송급장까지 대폭 내려온 상태다. 이에 언론의 전통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으며(최영재, 2011) 팩트체크 부서를 설치하는 언론사도 늘고 있다.

3. 연구 문제 및 방법

이 연구는 언론사 조직 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사실들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즉, 에디터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 중심의 게이트키퍼 관행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사실 확인이 미흡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혹은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 누락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에디터의 사실 확인 업무가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해보기로 했다.

연구문제 1-1. 한국 주요 신문 에디팅 과정에서 취재 부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한국 주요 신문의 에디팅 과정에서 표현 부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에디팅 과정에서 사실확인 은 에디터가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받은 이후부터 인쇄 전까지의 업무 과정으로 정의한다. 앞서 에디터의 업무에서 살펴봤듯이, 에디터의 업무는 주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는 일이다. 여기서 검토는 기사 내용 면에서 전체적인 논리에 이상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지, 기사의 관점은 어떠한지, 기사 맥락이 필요한 사실들이 모두 수집·확인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사실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등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 표현 면에서 봤을 때 각각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문장은 매끄럽게 쓰여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확인한 후 에디터는 취재기자에게 사실의 보완이나 수정, 확인 등을 요청하기도 하고 간단한 내용이나 문장은 직접 수정한다. 이처럼 에디터의 사실확인 업무는 취재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에디터의 사실확인 에 대한 연구 범위는 에디터가 취재기자에게 기사를 수령한 이후부터 인쇄 전까지 에디터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실확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에디팅 업무의 규범과 구체적인 실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 방법은 인터뷰 대상자의 견해를 깊이 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며 어떤 결과와 행위에 대한 배경 상황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Berger, 2000/2001). 특히, 수량화가 불가능한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Cresswell, 2012) 현재는 물론 과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 먼저 에디팅에 소요되는 시간, 에디팅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실 확인 업무 등 에디팅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실 확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관련한 추가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에디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디팅할 때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보도자료, 취재원 발언, 인터넷이나 SNS 소스 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한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취재기자가 쓴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등을 질문했다. 이후 답변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디터가 소속된 신문사 사회부에서 1주 이내에 발행한 기사를 준비해 에디팅 과정에서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는지 질문했다. 또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 예를 들어 신재민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 서울대 노조 파업, 버닝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당 사안을 취재, 보도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

되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사실확인 카테고리 내 각각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본인이 해당 사건의 에디터라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도 질문했다.

인터뷰는 편집국의 여러 부서 중 핵심부서이면서(김동규·김경호, 2005) 기사 생산 과정에서 사실확인을 특히 중시하는 부서인 사회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회부는 수습 기자를 훈련하는 부서로, 언론인으로서 사실과 사실확인에 대한 인식, 실천의 준거를 형성하는 등(남재일, 2008) 신문사의 사실확인 관행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부서이다. 또한 사회부는 언론인의 승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신연숙, 2009; 장하용, 2004), 에디터의 전문 역량 역시 타 부서에 비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한국 주요 6개 신문사 사회부 에디터를 각 신문사당 2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취재 기자들은 경력 12~25년차로, 골고루 분포되었다.

인터뷰는 2019년 1월 8일~3월 7일까지 약 두 달간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하는 언론사 접견실이나 회의실, 인근 식당과 카페 등에서 1~2시간가량 인터뷰했다. 인터뷰 전 인터뷰이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분석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이의 동의를 받아 모두 스마트폰으로 녹음했으며, 녹취된 내용을 문서화해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① 전체적으로 읽고 검토하는 과정, ② 다시 주의 깊게 연구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자료 내용에 대한 집중 검토, ③ 가장 대표성이 높은 자료 선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심층 인터뷰 자료는 ‘전체적으로 읽고 검토, 특정 자료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 찾기, 관련 있는 내용을 모든 자료에서 반복해서 찾고 모두 열거, 주제의 범주화, 범주를 축약한 최종본 결정, 범주에 따른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제안(Creswell, 1998/2005)을 고려한 것이다.

Table 1. List of in-depth interview subjects

mark	Coverage	experience	mark	Coverage
M	Social Department ⁶⁾	21 years	S	Social Department
N	Social Department	13 years	T	Social Department
O	Social Department	25 years	U	Social Department
P	Social Department	24 years	V	Social Department
Q	Social Department	21 years	W	Social Department
R	Social Department	17 years	X	Social Department

4. 연구 결과

1) 내용 확인 측면에서의 게이트키퍼 관행

(1) 신뢰,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형식적 사실확인

대부분의 에디터들이 취재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기본적으로 믿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 기자가 기사 작성할 때 사용한 보도자료, 취재원의 발언 등에 대해 재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했고, 실제로 재확인하지 않는 에디터가 많았다. 에디터 스스로도 “과도하게 신뢰한다”(O)고 말할 정도로 취재기자를 믿고 있었고, “취재 안 하고서 ‘이겁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R)는 전제 하에 기사를 검토했다. “조직 문화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S), “수습기자 때부터 훈련을 시키다 보니”(U)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에디터가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취재 기자가 쓴 기사고 책임도 취재 기자가 가장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N, V) 믿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진행되는 에디팅은 개별 사실이 정확한지, 사실 간의 연결 관계나 의미 부여가 정확한지 따져보며 검토하기 보다는 큰 맥락에서 이상이 없는지, 글의 문맥상 모순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정도로 그쳤다.

이러한 신뢰는 불충분한 검토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한 기사당 10~20분 정도밖에 검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심을 깔고 일을 할 순 없는데”(S)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목을 내놓고”(O) 산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지미의 세계’와 같은 조작된 기사의 예를 들면서 다시 질문했을 때도, 에디터들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서”(X) 주변 정황을 조금만 확인해 봐도 조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미의 세계’와 유사한 타사 수습기자 사례를 얘기해 준 에디터(S)도 있었다. 이 에디터는 유일하게, 모든 확인 항목에 대해 취재기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심되는 취재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에디터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고치는 일은 거의 없”(S)었다. 에디터가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상식과 경험(P), 그리고 취재기자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N, S, T)이었다. 취재기자에게 재질문하는 행태는 에디터가 독자적으

6)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viewees from being identified with different department names and job titles for each newspaper company, the affiliation of the interviewed editor was unified by the Social department and the rank was not indicated. For reference, the interviewed editor's positions were 2 caps, 5 manager, and 5 general managers.

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터의 사실확인 업무를 취재 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에디터들은 취재기자에게 다시 확인할 책임을 부여했다.

데스킹하는 팀장이나 부팀장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경제부 기자를 예로 든다면 거기 통상적인 보도자료가 패턴형으로 반복되면서 예산안 자료 등 약간 예측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부분이 틀리기 쉽고 용어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아는 거죠. 제가 범조 기사를 썼는데 형사범 절차상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썼다, 그거는 사실은 데스크 보는 사람의 경험+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부분. (P)

미심쩍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직접 찾아본다”(U)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다. 간단한 개별 사실들,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물의 정확한 명칭, 숫자 등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M, P, S), 법제처의 법령정보 사이트 등 취재원이 소속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O)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언론사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련 검색어를 치면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사 취재기자가 쓴 기사 내용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다시 취재기자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때 ‘줄오보’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사 기사를 이용해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김사승(2009a)의 연구에서 취재기자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기자가 접촉한 취재원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경우도 있었다.(N, T) 그리고 실제로 거짓 취재한 것이 밝혀진 사례도 있었다.(M)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사실 확인 행위에 대해 취재기자가 알지 못하도록 취재원에게 요청하는 등, 이례적이고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인식했다.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맥락에서 이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오는 경우 있으면 해 본 적 있어요. ... 멘트 중에 생똥맞은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취재원에게 직접) 물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기자한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N)

기사 표절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에디터들은 주요 일간지에서는 통신사나 타사 기사

7) 에디터에게 질문할 때는 현장 용어인 ‘우라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질문했다. <미디어오늘>은 ‘우라카이’를 ‘언론계 은어로, 기사의 핵심이나 내용을 살짝 돌려 쓰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라 쓰

를 표절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답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너무 심하게 통으로 간 건 문제 삼지만”(P) 기사 일부를 베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것을 베껴 쓰면 우리 실적이 높아져 좋아하는”(P) 관행이 있기 때문에, 타사 취재기자가 자사 기사를 표절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자사 기자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급할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후에 취재를 하고 바꾸면 문제가 없다”(R), “반복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P) 통신사 기사를 전제 표시 없이 인용하는 것에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 관련 기사는 타사에서 단독 특종이 나오면 독자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비슷한 기사를 작성해 출고하고 있었다. (P) 인터뷰한 모든 에디터들은 연구자에게 통신사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표절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마감이 닳았는데 우리 현장에서 취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기사를 나가야 할 것은, 사소한 사건·사고 기사 3~4장 들어가는 기사면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 판에 취재한 걸로 바꾸죠. 지금도 표절이 하루에 한두 건 있지 않을까. 사회부만 빠지면. (R)

이주 큰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논의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제 뭐 정말 중요한 형태가 아니고 약간, 경제 기사 쓰면서 경제지 기사의 일부를 문단 수준으로 베꼈다거나 그런 게. (N)

인터뷰한 에디터 절반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꼼꼼히 보면”(X), “취재기자와 대화하다 보면”(Q), “베낌을 당한 기자, 타사 기자가 연락을 해 오면”(N) 취재기자가 표절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표절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인터뷰한 에디터 절반은 표절 여부를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 N, O, W 에디터는 “표절이나 조작은 데스크 과정에서 잡기 힘들다”며, 표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표절을 했던 타사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케이스 한두 개, 원고지 2-3매 짜리들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체크 못 들어가면... 기자들 (취재)하러면 뻥한 이야기 많거든요. 짐작 가는 거. 편의점 사장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강남구의, 강남구 압구정의 7편의점 하면 어떻게 찾겠어. 압구정에 수백 개가 있을텐데. 그러니까 대강 전해 듣고 예를 들면 (인터넷)게시판 뜯 사례에서 슬쩍 익명으로 7씨, 8씨 하면 충분히 조

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표절이 더 가까운 표현이라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카이’를 ‘표절’로 대체해사용했다.

작할 수 있죠. 그 정도 못 잡아 낼 수 있죠. (U)

그런 이야기 들긴 했죠. 예전에 기사도 잘 쓰고 없는 멘트를 만들어 넣기도 하는 그런 분이 계시어요.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 말씀드리기가. (X)

그걸 제가 다 기사를 리드 찾아보고 할 순 없으니까 그 자체는 알 수 없죠. 본인이 마음먹고 하면 알아내기 힘들죠. 데스크가 그것까지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회사 자체의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엄벌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P)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에디터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과정은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확인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사실확인 방법도 없었으며, 적극적인 사실확인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한 모든 에디터가 취재자가 기사를 표절, 조작한 사례를 경험했으면서도, 표절과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었다.

(2) 방어를 위한 표면적 사실확인

에디터의 사실확인 관행은 방어적인 행태를 보였다.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반론권을 가진 핵심 취재원의 포함 여부였고, 종합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즉, 에디터들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될 만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모든 에디터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반론권’을 떠올렸다. 에디터들의 답변을 미루어 봤을 때, 반론은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이었다. “핵심 이해관계자의 반론이 없으면 기사의 요건이 안되는 기사”(W)이며, “형식적으로 반드시 필요한”(X) 것으로, 중재위, 소송에 걸리기 때문에 요즘 반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P, U)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T)라는 말 역시, 에디터들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러한 양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반론권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 즉 사회적 규범이 언론사 관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에디터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에디터가 기사에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일부 에디터는 관점이 다양한 취재원이 포함될수록 진실에 가까운 기사가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연결방식과 의미 부여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보여줄 수 있다”(S)며 관점 다양성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에디터도 있었다.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기사가 “퀄리티가 훨씬 더 높고”(X), “균형을 잡기 위해”(N),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N) 등 사실 보도, 진실 보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같은 신문사 내에서 연차나 직급이 높은 경우 인식 수준도 더 높은 것도 발견됐다.

센세이셔널하게 해서 많이 보게 하고 싶죠. 그와 동시에 오늘날 신문 팔고 미는 게 아니잖아요. (M)

사실 현장에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 잘 해주는 사람하고만 취재하고 싶고 그 사람은 정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알죠. 균형 맞춰 줘야죠. 현장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알고 있잖아요. 저도 편향되었겠지만 데스크 되어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W)

순간적으로 취재원만 가지고 취재를 한 거냐, 아니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이유, 연구자들이면 연구자들, 다양한 관점을 집어 넣었느냐, 그래서 설득을, 어쨌든 기사는 독자를 설득해야하거든요. 물론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처음이지만 설득을 하려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 그런데 기획을 하려면 단발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당장 이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취재를 했더니 이렇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취재해봤더니 이걸 그쪽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기사 안에 제시를 해줘야 해요. 기사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야, 이걸 이런 건데, 숙지해, 암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있고, 취재를 하고, 이런 관점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어, 차츰 쌓아 나가다보니 결론은 이게 맞는 것 같아, 판단은 독자가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취재를 해서, 충분한 취재라는 게 추상적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R)

그러나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목적은 에디터마다 다르게 답했다.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목적이 진실 추구라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고, 독자층을 넓히기 위한 실용적 수단이라고 얘기한 에디터도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단순히 계속해서, ‘야, 이걸 기사로 이런 애들을 비판해야지, 학교를 비판해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난리야라고 쓸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건 어때?’ 이런 걸 제시해주는 기사인 거죠.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S)

편향되지 않은 게 좋겠죠. 정치적인 편향성을 안 필수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편향성을 안 띠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니까. (O)

다양한 관점을 가진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기사를 검토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핵심 논조에 맞는 취재원이 포함되었는지, 핵심 논조가 매끄럽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고려했다. 즉, ‘관점의 다양성’보다 ‘관점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 기사에 이해 당사자나 관점을 다양하게 넣는 것보다 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기사를 쓰는 것이 더 좋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기사에서도 법원이나 검찰, 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범위를 넓게 생각하진 못했다. 반론권을 가진 이해관계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를 생각해내지 못한 에디터도 있었고(T), 기사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 기사가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 사소하거나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지엽적이고 작은 거 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걸 일반적인 독자가 알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P)

실제로 에디터들은 취재원의 발언 내용의 사실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기사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취재원 발언 내용이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론 없이 기사를 작성해도 된다고 답했다(M, P). 또 취재원에 따라, 정황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이라고 추정될 경우 기사를 작성해도 된다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다.

언론 보도를 해야죠. 얼마만큼 보도할 거냐 얼마만큼 비중을 뒀서 보도할 거냐, 그런 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판단하는 사람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합리적으로 봐서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뭘

가 사실과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조그맣게 쓰거나 반론을 많이 달아서 쓰거나 그렇게 하겠죠. 언론은 강제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에 없는 걸 검증할 수 없죠. 상식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O)

구체적인 인식과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이 각각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내용을 기자의 독자적인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인터뷰한 에디터 중 대부분은 발언 내용이 정황상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기상 중요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가 검증되기 전에도 기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재민은 본인이 당당하게 봤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검증하겠나? 물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재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N)

똑같은 기준으로, 그게 어느 정권이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정권 권력을 가지고 국민한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감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뭐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검증하고 확인할까나 반론권 팩트체크는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런 것 자체는 저는 보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P)

그 사람이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무슨 억하심정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체크를 했을 거예요. 내부 고발자 이야기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크로스체크하기 어려운 성격이었을 것인데. 당시에 중요한 정황들 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라든지. 어느 정도 취재를 하죠. '이게 보도할 만하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처음엔 100% 확신할 순 없겠지만 공론화시킬 만하다, 판단이 들면. (Q)

주요한 이슈로 국민들 이목과 관심을 끄는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기사를 계속 써야죠. 계속 쓰는데 이 기사의 검증이나 이 기사가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바로바로 검증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 당사자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김태우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서 반대 입장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도로 간접 정황 검증
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김태우가 하는 이야기가 가령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 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민정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이지요. 그런
방법들을 계속 해야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문은 게으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W)

이는 한국 언론이 사실의 ‘적절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박대민(2015)의 지적과 일치한
다. 박대민은 사실 보도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말한 그대로 인용했는지에 대한 ‘사실성 검증’과 그
정보원의 의견이 사실에 근거하는 동시에 ‘올바른 것’임을 확인하는 ‘적절성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 한국 언론의 경우 ‘사실성 검증’은 이뤄지지만 ‘적절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다. 즉, 에디터들이 말한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되진 않았지만,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3) ‘요구된 사실’ 속에 왜곡되는 진실

에디터들이 사실확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독자, 여론, 또는 발행인에 의해 만들
어지는 ‘핵심 논조’였다. 에디터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여론의 향방을 배
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주로 독자 때문이라고 답
했다. (M, N, R, X) 규모가 큰 신문사일수록 독자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신문사의 논조
나 내부의 압력, 취재기자의 관점보다는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야할 때 기사에 대한 다른
관점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 에디터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R)는 표현을 썼고 어떤 에디터
는 “마녀 사냥할 때 동참해서 같이 “마녀다~” 하면 많은 경우 용서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
을 타고 쪽 간다”(M)고 표현했다.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다. 에디터들은 다양한 관점을 넣는 것이 독자들이 원치 않는, 상업적으로 좋지 않은 전략이며,
글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X)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 논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서 벗어난 개
별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핵심 논조)가 폭주하게 되는 경우는 신문사 안의 압력 때문에 폭주하게 된다고보다 사회
흐름을 타고 쪽 가는 거예요. 광우병 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다이빙벨 때도
제가 세월호 현장에 있었거든요. 진짜 오픈된 환경이었어요. 해군부터 민간 잠수부까지 옆에 지
나다니는 사람까지 무작위로 막 붙잡고 다 물어봐도 다이빙벨에 대해서 들어본 예가 없었어요.
정치색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사회 전체가 뭐라도 했으면 좋겠

고 정부 조치는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대중의 위세를 몰고 갈 때, 그럴 때 폭주하는 거죠. (M)

또 M 에디터는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해 ‘일본이 사과한 적이 있긴 하다’는 사실을 기사로 작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쨌든 독자들은 살아있는 걸 원하잖아요. 사고가 터지는데, 갑자기, 무슨 차분히 분석하자, 이 건 독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굴러가게 터지는 경우 오늘 뭐가 새롭지,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원하지(를 살피죠). (Q)

매일 매일 사건 터지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일 취재 경쟁이 붙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1면에 그게 났어요. 내일 <중앙일보>에 났어요. 우리는 안이하게 팩트 확인 안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취재해, 취재해, 취재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취재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그 팩트를 확인하러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독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않아요. ... 우리 입장에서 독자는 이런 걸 원한다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최면을 건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건이 굴러가면 그 상황에서 커다란 흐름이 있을 때, 흐름을 완전히 ‘아닙니다’라고 뒤엎을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흐름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R)

성향이 강할수록 독자가 원해서 그렇게 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게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X)

기사의 핵심 논조는 대체로 “언론사 발행인의 관점”(R)이라고 말한 에디터도 있었다. 발행인의 관점은 대체로 신문사의 논조로 대변되는데, “각 언론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 일부 에디터는 신문사의 논조와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문사 내에서 사회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의 논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회사의 관점이 투영돼야 해요. 발행인의 관점이. 이 신문의 편집과 이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인의 관점이 투영이 되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R)

데스크나 회사의 논조라는 게, 거기 매몰되지 말아야겠다고 계속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살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정리되는 거고, 남이 보면 그게 도그마일 수 있는 거고. (M)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디터들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실들이 수집되는 것보다 여론과 신문사의 논조에 맞는 ‘요구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 어떤 관점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와의 논의, 수집된 사실에 대한 분석, 다른 에디터와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여론의 향방과 신문사의 논조가 확인된 사실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요구된 사실’에 맞춰 취재를 지시하고 에디팅하는 방식은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오보를 낳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개별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여론과 논조에 의해 누락, 탈락되면서 종합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2) 표현 확인 측면의 게이트키퍼 관행

(1) 취재원 익명 표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대부분 실명 취재원 사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규정에 있는 익명 사용의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에디터도 있었고, (N, M, N, S, X) 익명 취재원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했다. (N, S)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할 때, 에디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Q, T, X)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었다.

에디터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원칙이죠. 에디터가 그걸 모르면 ‘A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 아는 고위직인지, 전혀 모르는 하위직인지, 옆집 애긴지. 기사에는 전언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래서 전언이라는 이유로 캔슬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Q)

실명을 일단 물어보죠. 누가 한 이야기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익명을 써야 하는지 실명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X)

그러나 기사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익명 취재원이 핵심 취재원이 아니거나 일반인

취재원일 때는 대체로 익명 취재원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도 준칙 등에는 취재기자가 실명으로 표기한 취재원을 에디터와 논의 후 익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지만, 대부분은 취재기자가 익명으로 처리한 후 에디터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문사 원칙이 “모두 실명을 띄우고 데스크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도, “다른 취재원이 그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M)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사내 시스템에 실명으로 올리도록 시스템이 있어도 “편집국 내 다른 사람이 취재원 정보를 보고 외부에 얘기”(M, V)하는 등 취재원 실명 유출 문제로 인해 취재 기자에게 처음부터 익명으로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취재원 익명 처리를 미리 논의하는 경우도 없었다. 일부 에디터들은 “취재기자에 대한 신뢰와 취재원 보호”(V)를 이유로 익명으로 표기된 취재원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넘어가죠 대체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보면 알거든요. 가짜로 만든 것 같으면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 정도 신뢰 관계는 갖고. 수습기자 때부터 훈련을 시키니까 직접 확인하고, 전화 듣고 하다 보면 이상하단 느낌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빨리 써야할 때 연합 뉴스에 난 걸 워딩을 옮겨쓰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워딩이 이상하면 제가 대강 알죠. 나도 예전에 가짜 몇 개 담았거든.(웃음) 그런 경험 있으니까. (U)

실명을 딸 수 있는 거면 실명을 뺀 거고 실명을 부담스러워하면 익명을 썼을테니 그거는 취재기자를 대부분 믿죠. 엄격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O)

취재기자가 실명으로 작성한 취재원을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익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원 보호의 범위는 에디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취재기자들이 실명으로 띄워놓은 것 중에 제가 익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한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어떤 30대 여자 의사가 “생활은 안정됐지만 휴직했고 집에서 논다.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걸 썼어요. 기사가 나가면 시어머니도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만 신상을 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멘트가 간간 걸 가지고 동창이 만날 때마다 “개는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는 게 괴곤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M)

에디터들은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으며, 취재기자들이 익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 또 익명 취재원을 쓸 때 취재기자가 데스크에게 상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취재처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고 취재기자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익명 취재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차이, 예를 들어 핵심 관계자, 주요 관계자, 관계자 등에 대해 취재기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에디터는 누구인지 짐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표현은 취재기자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언론계에서 공유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익명 취재원 사용 관행이 언론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가령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는 홍보수석일 경우가 많아요, 춘추관 대변인 같은 경우도 핵심 관계자, 그것보다 조금 급이 낮다고 그러면 주요 관계자라고 해서. 비단 우리 회사 뿐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홍보수석이 그랬구나 이렇게 알죠.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런데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아는 코드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주요? 대변인 맞지?”, “네, 맞습니다”, 확인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부원들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현장에서. (W)

(2) 객관성을 가장한 의견 표현

사실을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속성이라고 답한 에디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과장, 왜곡, 축소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객관적인 글쓰기를 강조했다. “편집국장부터 부장단까지 형용사 많이 쓰지 말라”(P)고 주문할 정도로 객관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술 원칙은 드라이하게, 부사나 형용사들 다 빼버리는”(U) 방식으로 에디팅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초를 치는 게 좀 있었지만”(P) 현재 편집국은 형용사나 부사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고, 객관적인 글쓰기가 편집국 내 규율로 자리잡혔다고 말했다. (P, U) “에디터가 초치기를 하려고 해도 취재기자가 못하게 한다”(V)는 답변도 있었다. ‘갑질’ 등 과도하게 개념화된 표현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저는 형용사 부사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자, 그리고 특히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특정 누구를 비판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데 이걸 형용사 부사를 막 쓰다보면 왜냐하면 기자도 쓰다보면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쓰다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쓰는, 그러니까 데스크가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쓰다보

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제3자로써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이상 세상 일이라는 게 분쟁의 경우는 당사자 이야기는 분명 다른 거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제안이면 관계없지만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표현을 쓰지 말라,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P)

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이야기가 되는 단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재미, 갈등, 긴장. (그런 단어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갑질이 뭔데, 갑질이 뭔지 정의해 봐, 피고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면 전부 갑질이나, 폭행은 폭행이고, 고용계약을 위반했으면 그거 위반이지, 뭐가 갑질이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N)

기사 쓰기 방식의 변화도 형용사나 부사를 통한 의미 부여에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장에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기사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형용사나 부사 등 의견으로 의심할 수 있는 표현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

그러나 대다수의 에디터들은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에디팅하지 않았다. 에디터들에게 ‘알려졌다’, ‘전해졌다’, ‘지적이 나온다’ 등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과 직접 인용문의 주관적 술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에디터들은 기사쓰기 원칙에서 어긋난 행태라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언론사의 논조, 기자의 의도(R)나 핵심 논조를 위해 전체 내용을 왜곡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N, U) 또 충분히 취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기자가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X)

쓸 때 무책임하게 어떤 지적을 하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는 평이 나온다’라고. 이 평을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쁘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M)

‘비판이 나온다’고 해놓고 뒤에도 ‘이런저런 비판이 나온다’. 보통 기자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언론사 논조로 넣는 거거든요. 취재를 하고 쿼트를 탄 게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이런 그럴(어떤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난 이렇게 쓰고 싶어 이런 마음에서) 경우가 맞아요. (U)

문제 의식은 강하지 않았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표현은 대체로 “수사법”(M), “기술 의 기법”(O),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것이다(S). “바람직하진 않지만 ‘최악은 아니’(M)라고 말했다. 오히려 인터뷰한 에디터들의 답변 속에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통해 기자나 신문사의 논조, 맥락이 암묵적으로 포함되고 있고,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도구”(T)라고 하지만, 기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인정했고,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불가피하게 쓴다”(U)고 했지만, 의견을 드러내거나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활용하고 있었다.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사실상 형용사나 부사보다도 은밀하게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다.

선수들끼리 언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간접 확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확인했을 수 있어요. ... 확인했다고 안 쓰고 추정 비슷하게 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S)

쓰는데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쓰는 그걸 퍼센트 낼 수 없잖아요. 100% 중에 이 사람이 70%가 그런 목소리인지 10%가 그런 목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취사선택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취사선택을 하는 경우에 ‘알려졌다’나 ‘지적이다’라는 게 쓰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거꾸로 쓸 수도 있겠죠. (X)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는 언론사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취재원 보호라든가,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사에 담지 못하는 여러가지 취재 배경과 맥락 같은 게 있잖아요. (S)

기술적으로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문장 넣어야 하는데 기자의 주관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T)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기도 했다. 즉, 자사에서 쓴 기사에 나오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사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점,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방식이라며 비판적으로 얘기했다. S 에디터는 자사 기자가 쓴 정파성을 띤 기사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내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보자를 통해 나온 말을 검찰이 부인하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썼을 것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강하지 않은 신문사의

에디터에게 관련 내용을 질문했을 때의 반응은 달랐다. 각 신문사가 자신의 정파를 드러내기 위해 쓴 표현이라는 것이다.

기자, 언론사의 생각. <한겨레>는 근본적으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여럿 지적했었고, <조선>은 반대일 거고. (X)

결과적으로 에디터들의 객관적인 글쓰기에 대한 인식은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밀하게 의견을 강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다. 또 에디터에 의해 여론에 맞는 사실 수집과 확인, 일관된 관점을 드러내는 맥락적인 글쓰기 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사실확인 역행하는 관행이 관찰됐다. 일관된 맥락에서 벗어나는 사실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제외되고 표현 역시 맥락에 맞게 은밀한 방식으로 의견을 포함시키면서 사안에 대한 종합적 진실이 기술풀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디터들은 취재와 기사 작성 관련 사실 확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현실의 한계를 강조하며 잘못된 실천 방식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에디팅 과정에서 사실확인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형식적인 행위였다. 기본적으로 에디터들은 스스로 “과도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취재 기사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 사실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다. 취재기자가 표절과 조작 경험에 대해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김창숙, 2020), 실로 과도한 신뢰였다. 취재원의 실명 표기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취재기자가 쓴 익명 취재원에 대해 검토하지 않거나, 실명으로 표현한 취재원을 익명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 표절과 조작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디터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디팅 과정에서의 사실확인은 통과 의례에 불과했다. 또 에디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반론권을 가진 핵심 취재원의 포함 여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기사의 주관적 표현도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명백하게 의견이 포함된 표현은 철저히 검토하지만,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의견을 포함시키는 무주체 피동형 문장이나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술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에디터들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확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만 방어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또 신문사의 발행인,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핵심 논조에 따라 사실을 수집, 확인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핵심 논조에서 벗어난 개별 사실이나 관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요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에디팅하는 기사는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대형 오보를 낳게 되는 원인이다. 에디터들은 진실 보도,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디팅했다. 일관된 관점을 드러내는 초점에 맞춘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사실확인 역행하는 관행이 발견됐다.

정파적인 뉴스가 생산되는 것과 관련해 에디터의 관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동안 신문과 방송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서 끊임없이 정파적인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꾸준히 밝혀져 왔다(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최진호·한동섭, 2012; 홍주현·손영준, 2017). 그러나 실제로 정파적인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김사승(2009b)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박영흠과 김균(2016)이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상대 진영에 감정적인 공격과 악마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진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드러난 정파성이 수정되지 않거나 때로 강화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디터가 지시한 '요구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게이트키퍼가 이뤄지고, 개별적인 중요한 사실이 여론과 논조에 의해 누락, 탈락되는 모습이 그 증거다. 또 표현 측면에서 봤을 때, 타사의 무주체 피동형 문장의 사용에 신문사의 논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에디터들의 해석도 취재기자 단계에서 작성된 정파성을 띤 문장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정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이나 사안이라도 조직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구에 맞춰 해석을 달리하면서 기사의 비중과 강도를 조절할수 있다는 김동원(20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에디터의 사실 확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을 강화하고 편집국 내 사실 확인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디터 인터뷰를 통해 진급 시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실 확인에 대한 지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 발견됐다. 모든 에디터들은 에디터 진급 시 조직 관리와 관련된 교육만을 받고 있었으며, 저널리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해서는 수습기자 시절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받은 일회성 교육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뷰한 에디터들은 기존 관행이 합리화, 내면화, 공고화되어 있었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나서지 않

은 경우 기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더라도 매일 진행되는 업무 사이클 속에서 관행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에디터가 편집국 조직 내 실질적인 규범, 규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위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잘못된 행위는 언론사 전반의 문제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과 사실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저널리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언론사 내 기사가 작성된 후 사실을 재검토하는 담당자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에디터가 자사 혹은 타사의 취재 기사가 기사를 표절, 조작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현실에서 신문사 내 사실 확인 담당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편집국의 사실 확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경영난을 이유로 교열부를 외주화하고 심의실을 폐지하고 있는 한국 신문사의 경영 행태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려 독자의 신뢰를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 확인된, 정확하고 종합적인 사실을 담은 뉴스 콘텐츠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시민의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 요구는 신문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고,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에서 매년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시민이 한국 저널리즘에 거는 기대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 저널리즘 현실의 간극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2019)를 살펴보면,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 뉴스의 공적 기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사 뉴스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 다만 조국 사태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유사한 정파성을 가진 언론을 소비하는 정파적인 시민은 정파적인 미디어가 살아남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게이트키퍼 연구, 언론사 관행 연구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게이트키퍼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게이트키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뉴스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관행을 알아보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생산되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냈다. 또 그동안 국내 언론사 관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취재기자에 집중하거나 특정 부서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며, 에디터의 관행에 대해 논의된 것은 김사승(2006) 정도에 불과했다. 에디터는 편집국 내에서 위계적인 직제로 인해 실질적인 규율로 작용하여 언론 관행과 문화, 언론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언론사 에디터에

특화된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는 언론사 내부 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출고되는 뉴스들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그 원인에 대해선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에디터들의 사실과 사실 확인에 대한 인식, 실천 방식 등은 언론이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하도록 촉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신문사 사회부 에디터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사실확인 관행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추후 연구 대상을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 등 다양한 언론사 형태와 규모별로 추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서마다 사실확인 기법과 수준, 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부, 문화부, 뉴미디어부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해 사실 확인 방법과 수준, 관행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확인 관행이 형성된 원인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이들은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사실확인 부족의 원인이라고 답하였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해외 선진 언론과 사실확인에 대한 인식, 실천 방식 등을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은 편집국 내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종합적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한국 언론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적인 편집국 조직 체제와 에디팅 과정은 기사의 사실, 진실을 확인하고 검증하기보다는 편집국장이나 언론사 조직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여 기사의 진실성과 사실성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발달로 '다수 대 다수'의 정보 공개 방식, 즉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매개하는 언론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기존 전통 언론의 게이트키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편집국 조직에 대한 정비, 에디터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 진실 검증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s

- Bass, A. Z. (1969). Refining the “gatekeeper” concept: A U. N. radio case study. *Journalism Quarterly*, 46, 69-72.
- Berger, A. A. (2000).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Borden, S. L., & Tew, C. (2007). The role of journalist and the performance of journalism: Ethical lessons from “fake” news (seriously).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2(4), 300-314.
- Borel, B. (2016). *The Chicago guide to fact-chec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uns, A. (2003). Gatewatching, not gatekeeping: Collaborative online news.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07, 31-44.
- Canby, P. (2012). Fact-checking at The New Yorker.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s://archives.cjr.org/critical_eye/fact-checking_at_the_new_yorker.php
- Creswell,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Cho, C.-R. (2006). A study of the election-related reporting and gatekeeping process on the local newspaper: Focused on Gans' multiperspectiv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0(4), 381-410.
- Choi, Y. (2011). The theory of the vicious circle of divided politics, divided media, and divided public opin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Symposium and Seminar*, 137-152.
- Choi, J.-H., & Han, D.-S. (2012). The partisanship of media and the media intervention in political-power cre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ajor newspapers' editorial articles during the 13-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2), 534-571.
- Gieber, W. (1956). Across the desk: A study of 16 Telegraph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33, 424-432.
- Hong, Y.-J. (2007). *Types and Causes of the Korean Press' Incorrect Reporting: Study on Ten Presses (1990~2006)*.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J., & Son, Y. J. (2017). Korean media partisanship in the report on THAAD rumor: Network and frame analysi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4, 152-188.
- Jang, H.-Y. (2004). A study of Korean journalists' organizational career path: Analysis of newsroom peopl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8(2), 36-67.

- Jang, H., & Oh, S. (2001). Study on the use of reporters in the Korean-American newspaper. *Press Criticism*, 7.
- Jung, Y. S. (2012). An attitudinal study of news value among Korean journal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4, 25-44.
- Kim, C. S. (2019). *Fact checking or fact making?: A study on Korean newspaper fact-checking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2020). A study on Korean newspaper fact-checking practices: Major daily newspapers, social department repor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3), 286-335.
- Kim, D. (2017). A study on organizational factors to influence gatekeep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5), 107-126.
- Kim, D. (2020, 6, 10). Wrong report, now we will definitely AS. *Reporter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81>.
- Kim, D., & Kim, J.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atekeeping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7(3), 29-37.
- Kim, D.-G., & Kim, K.-H. (2005). The qualitative study about the news material collecting organization and habitual practice of Korea newspap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2), 33-68.
- Kim, D. Y., Kim, S. H, & You, Y. M (2013). Fair mediator or Biased Advocator: Understanding journalism partisanship through analyzing opinion section of national da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3(3), 75-122.
- Kim, D., & Kim, J.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gatekeeping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 17(3), 29-37.
- Kim, K. (2012). Online news production in the new journalism environment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9(1), 7-37.
- Kim, K. (2016). Gatekeeping of mobile portal news influence on using news in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3), 117-144.
- Kim, K.-K., & Song, Y.-H. (2004). Exploratory of the classification of major press corps in Kore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8(1), 38-75.
- Kim, S.-S. (2004).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sm and news quality in newsgathering activities: Concerning recruiting rout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8(2), 56-78.
- Kim, S.-S. (2009a). News executives' attitudes towards usage of agency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4), 276-298.

- Kim, S.-S. (2009b). *Understanding of political news production through analysis of news production practic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 Press Foundation, Seoul.
- Kim, S.-S. (2012). A study on tensions between newsgathering and copy editing domai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4), 55-79.
- Kim, Y. (2009). *A study on the career path of newspaper journalis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3rd ed.).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 Korea press foundation (2013). *Journalist Consciousness Surve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Korea press foundation (2017). *Journalist Consciousness Surve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Korea press foundation (2019). *Digital New Report*.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Lee, N. Y. (2018). Scientific objectivity, formal objectivity, Korean formal objectivity: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sources and quotations used in Korean newspapers and New York Times and The Times of Lond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2), 112-142.
- Lee, J.-K. (2003). Conditions for a Free Press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2), 54-77.
- Lau, R. W. K. (2004). Critical realism and news production. *Media, Culture and Society*, 26(5), 693-711.
- Lippmann, W. (1922). *The Public Opinion*. San Diego, CA: Harcourt, Brace & Co.
- Mcuail, D., & Windaghl, S. (1981). *Communication Model for the study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NY: Longman.
- Missouri group (2017). *News reporting and writing. 12th edition*. Boston, MA: Bedford/st.martin's.
- Nisbet, E., & Garrett, K. (2010). *Fox News Contributes to Spread of Rumors About Proposed NYC Mosque*. Retrieved from <https://rkellygarrett.com/wp-content/uploads/2014/05/Nisbet-Garrett-Fox-News-contributes-to-spread-of-rumors.pdf>
- Nam, J.-I. (2008). The cultural particularity of objectivism in Korea: The structural feature of routine reporting activities of police repor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8(3), 233-270.
- Park, D. (2015). A study of double validity claims in quotations: News source network analysis of news on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in the Dong-A Ilbo and the Hankyoreh.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5), 121-151.

- Park, Y., & Kim, K. (2016). Journalism as a ritual: For a new understanding of partisan journalism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1), 202-228.
- Park, Y.-G. (1996). A plan to improve the Korean newspaper coverage system. *Journalism Research*, 5, 87-140.
- Paskin, D. (2018). News publishing across platforms: Gatekeeping for print, web, Facebook and Twitter [On-Line]. *Newspaper Research Journal*. <https://doi.org/10.1177/0739532918806897>.
- Redmond, J. W. (2006). Issues in Human Relations Management, In A. B. Albarran, S. M. Chan-Olmsted, & M. O. Wirth (Eds.), *Handbook of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 (pp. 115-144). London: Routledge.
- Schäfer, M. (2011). Science journalism and fact checking.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10(4), 1-5. Retrieved from [https://jcom.sissa.it/sites/default/files/documents/Jcom1004\(2011\)C02.pdf](https://jcom.sissa.it/sites/default/files/documents/Jcom1004(2011)C02.pdf)
- Schudson, M. (1996). The sociology of news production revisited.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2nd ed.) (pp. 141-159). London: Arnold.
- Shim, J.-C. (2003). A few thoughts on news values in an era of the digital media.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33-60.
- Shim, J.-C., Jung, W. K., & Kim, K. S. (2003). How Korean and American newspapers cover the educational news: A content analysis of news val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3), 95-124.
- Shoemaker, P. J., Danielian, L. H., & Brendlinger, N. (1991). Deviant acts, risky business, and U.S. interests: The newsworthiness of world events. *Journalism Quarterly*, 37, 381-392.
- Singer, J. B. (2008). The journalist in the network: A shifting rationale for the gatekeeping role and the objectivity norm. *Trípodos. Facultat de Comunicació i Relacions Internacionals Blanquerna*, 23, 61-76.
- Siegel Committee (2003). *Report of the Committee on Safeguarding the Integrity of Our Journalism*. New York, NY: Author.
- Szalavitz, M. (2010, 10, 1). *30 years since 'Jimmy's World': The media and drugs*. Retrieved from <https://healthland.time.com/2010/10/01/30-years-since-the-phony-heroin-addict-article-the-media-still-blows-it-on-drugs/>
- Yoo, B.-S., & Jeong, I.-K. (2012). The difference of gatekeeping and professional role conceptions between portal news editors and internet media news editor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4), 267-303.

Westley, B. H., & MacLean Jr, M. S. (1957). A conceptual model for communications research. *Journalism Quarterly*, 34(1), 31-38.

White, D. M. (1950). The “gate 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4), 383-390.

최초 투고일 2020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5일

부록

- 김경희 (2016). 저널리즘 관점에서 본 모바일 기반 포털 뉴스의 게이트키퍼와 이용자의 뉴스 이용. <한국언론학보>, 60권 3호, 117-144.
- 김달아 (2020, 6, 10). 잘못된 보도, 이젠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기자협회보>.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81>.
- 김동윤·김성혜·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 김동원 (2017).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8권 5호, 107-126.
- 김동원·김지연 (2017). 디지털시대의 게이트키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권 3호, 29-37.
- 김사승 (2004). 전문기자의 전문성과 뉴스의 질을 구축하는 취재보도 관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56-78.
- 김사승 (2009a). 편집국 간부의 통신기사 활용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276-298.
- 김사승 (2009b). <뉴스생산 관행분석을 통한 정파성 뉴스생산 이해>. 언론의 정파성 문제 세미나. 한국언론재단.
- 김사승 (2012). 취재영역과 편집영역의 긴장관계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55-79.
- 김창숙 (2019). <사실 확인인가, 사실 만들기인가: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창숙 (2020).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주요 일간지 사회부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 3호, 286-335.
- 김경모 (2012).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7-37.
- 김관규·송의호 (2004). 국내 주요 출입처 기자실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18권 1호, 38-75.
- 김동규·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33-68.
- 김동원·김지연 (2017). 디지털시대의 게이트키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산업연구>, 17권 3호,

29-37.

- 남재일 (2008).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233-270.
- 박대민 (2015). 사실기사의 직접인용에 대한 이중의 타당성 문제의 검토: <동아일보> 와 <한겨레신문>의 4대강 추진 논란 기사에 대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및 인용문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5호, 121-151.
- 박영흠·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 박용규 (1996). 한국 신문 취재제도 체제 개선 방안. <언론연구>, 5호, 87-140.
- 신연숙 (2009). <신문기자의 직업경로 패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심재철 (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뉴스가치에 관한 소론. <방송통신연구>, 33-60.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2003).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대학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3호, 95-124.
- 유봉식·정일권 (2012). 포털 뉴스와 인터넷신문 편집자의 전문가 역할 인식과 게이트키퍼 차이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267-303.
- 이나연 (2018). 과학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형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99-138.
- 이재경 (2003). 언론인 인식을 통한 한국사회와 언론 자유의 조건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54-77.
- 장하용 (2004). 한국 언론인의 조직 내 승진 요인에 관한 연구: 편집국과 보도국의 분석.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36-67.
- 장호순·오수정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연구. <보도 비평>, 7권.
- 정윤서 (2012). 신문기자의 뉴스가치에 대한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24권, 25-44.
- 조철래 (2006). 지역신문의 선거보도와 게이트키퍼 과정에 관한 연구: 갠즈(Gans)의 다원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81-410.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강준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진단과 전망> (137-152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1987년 이후 13~17대 대선캠페인 기간의 주요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언론인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언론인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디지털뉴스리포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홍유진 (2007). <한국 신문의 오보 유형과 발생원인: 10개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1990~200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주현 · 손영준 (2017). 사드 루머 (THAAD rumor) 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권, 152-188.
- Berger, A. A. (2000).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류춘렬 · 김대호 · 김은미 (역) (2001). <커뮤니케이션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3rd ed).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이재경 (역) (2014).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ippmann, W. (1922). *The Public Opinion*. San Diego, CA: Harcourt, Brace & Co. 오정환 (역) (2011). <여론/환상의대중>. 서울: 동서문화사.

의례적, 방어적, 의도적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의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관행 연구

김창숙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국 주요 신문 에디터들이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작성해온 기사에 포함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사실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다듬는지 그 관행을 알아보았다. 기존 게이트키퍼 연구가 주로 뉴스 주제 또는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행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6개 주요 일간지 사회부 에디터 12명을 인터뷰한 결과, 에디터들은 형식적이고 방어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으며, '요구된 사실'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표현 측면에서는 취재원의 익명 표현과 관련해 인식과 실천이 괴리되어 있었고, 명백히 문제가 되는 표현만 수정하고 있었으며 객관성을 가장해 의견을 표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디터를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교육 실시, 사실 확인 담당자 배치, 시민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한국 언론이 진실 검증자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핵심어: 저널리즘, 게이트키퍼, 에디팅 관행, 사실확인(팩트체킹), 객관주의